

일본, 국제표준화 대응 강화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국제표준화에 뒤처져 일본기업의 최첨단 기술이 매장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전략을 포함한 계획을 3월경에 제시할 예정. 특히 민관협력 조직을 신설하여 국제기구에 일본표준에 의한 규격통일 제안, 교섭력 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자국의 기술·규격이 국제표준으로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지식재산전략본부(본부장 간 나오토 총리)는 국제표준화에 뒤처져 일본기업의 최첨단기술이 매장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전략을 포함한 계획(공정표)을 3월경에 제시할 예정
 - 민관협력조직을 신설하여 국제기구에 일본표준에 의한 규격통일 제안, 교섭력 강화 등을 도모
 - 전략분야로 철도·수도사업, 첨단의료, 차세대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선정
 - * 가전제품의 경우 냉장고와 냉난방 등 에너지절약 가전부문에서 국제표준을 도모
 - 아시아 지역의 기후·환경 특성을 고려해 개발한 안전기준 등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통일규격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

- 업계에서는 1월 상순에 ‘기준인증이노베이션기술연구조합(가칭)’을 설립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파나소닉, 미쯔비시전기, 히타치제작소, 도시바, 소니, 경제산업성 산하 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 참여
-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일본자동차공업회,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이 3월경에 행동계획을 제시할 예정
- 전세계에서 국제표준화는 유럽이 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미국이 유럽을 추격하고 일본은 표준후진국 탈출을 시도하는 흐름에 있음.
- 세계의 표준과 강제기준은 대부분 유럽에서 탄생(ISO와 IEC[국제전기표준화회의]의 결정은 유럽이 주도)
- 1989년에 발효된 ISO와 CEN(유럽표준화위원회)간의 비엔나협정과 IEC와 CENELEC(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간의 드레스덴 협정은 유럽표준을 그대로 국제표준화하는 특권을 부여
- 한·중·일의 경우 2010년 12월 3국간 국장급 표준협의체 발족 서명식과 함께 제1차 표준협력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표준의 공동개발 및 3국 표준의 조화 등을 논의한 바 있음.
- 금번 일본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확대는 유럽·미국뿐 아니라 한국 등 주요국에서 정부주도로 규격쟁탈을 위한 공세가 강화되어 일본도 민관협력 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일본은 기술이나 품질에서 이기고도 표준 전략에서 패배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음.
- 일본은 DVD플레이어 등 가전제품의 사양을 조기에 공개함으로써 한국과 중국 등에 기술면에서 추격을 받아 시장을 빼앗기고 있고,

철도분야에서는 높은 안전기준이 해외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음.

- 이에 따라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어떤 기술을 어느 시기에 국제표준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마련을 민관이 하나가 되어 추진하고자 함.

<참고자료>

日本經濟新聞(2011.1.5),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0.12.22) 등